

충남리포트 제190호

ChungNam Report

2015. 10. 29.

‘도는 도답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권 선 필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philkwon@mokwon.ac.kr

본 연구는 공공행정 영역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요 약

CONTENTS

< 요약 >

1. 행정환경의 변화
2. 충청남도 기능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3. 정책 제언

- 오늘날 행정환경의 변화는 중앙정부 독점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인 국제기구,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단체, 풀뿌리 주민조직과 비영리 단체 등의 다양한 실체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변형을 요구
- 충남 도정의 경우에도 ‘도는 도답게’ 일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충청남도 기능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광역시도가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부분은 ‘자치행정권의 강화’로, 충청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산업 개발과 경제발전 주도’로 나타났음
- 또한 정책영역별로 국토개발과 과학기술은 중앙정부가, 그 밖의 농수산, 고용노동, 산업경제, 중소기업, 교육문화예술, 안전치안, 환경, 보건복지는 도가 정책주도권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함
- 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증가, 글로벌 경쟁의 심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광역지방정부로서 충청남도의 대응 방향은 지방분권의 강화, 광역행정 기능의 강화, 광역경제권 활성화, 복지재정의 확충, 그리고 도의 분권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함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행정환경의 변화 ◀

01

● 오늘날 정부에 대한 변화 요구

- 폐쇄적 국민국가 내부분제를 해결하는 행정이 아니라, 국제사회 내지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행정체제로의 전환 요구
- 중앙정부 독점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제기구,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단체, 풀뿌리 주민 조직과 비영리 단체 등의 다양한 실체들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의 변형이 요구

● 지방정부 역시 세계화, 지식정보화, 위험사회에 직면함으로써 이러한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음

● 충남 도정의 경우에도 ‘지방분권과 행정혁신’을 추구해오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는 도답게’ 일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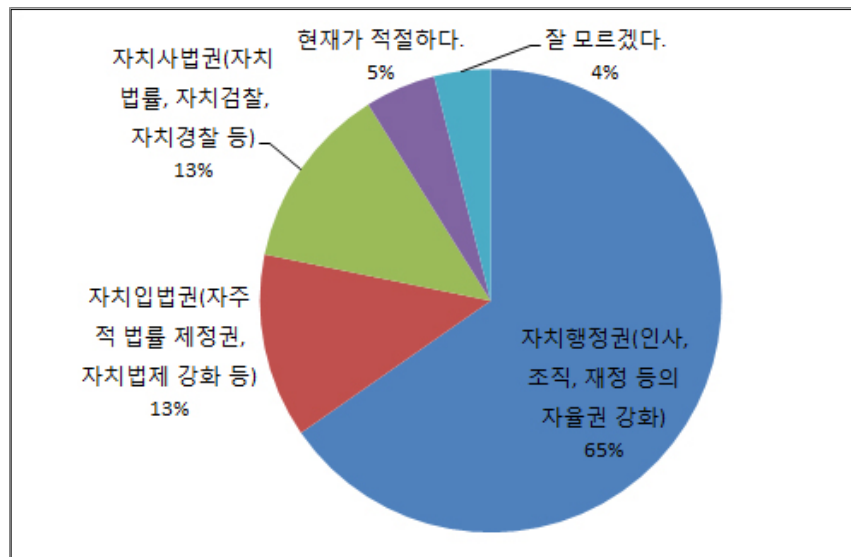
● 그간 충남 도정이 추진해왔던 ‘도는 도답게’ 접근의 한계점과 보완 방향

문제점	세부 내용	보완 방향
협소한 관점	현재 있는 법정사무를 중심으로 도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분석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광역도가 가지는 정부체계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을 놓치고 있음	- 거버넌스형으로 추진
미래지향성 부족	국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향후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하는 방향에서 도의 역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관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해외사례 심층 분석 -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 - 트렌드 조사 등을 통한 미래 예측 기법 반영
도민 참여	실질적으로 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납세와 투표의 주체로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논의가 취약함	- FGI, 설문조사 등을 통한 도민 의견 반영
변화 전략 취약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변화와 도의 역할 재정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시해야 하는 데 주로 변화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 ‘도는 도답게’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변화 전략 개발 및 실행

02

▶ 충청남도의 기능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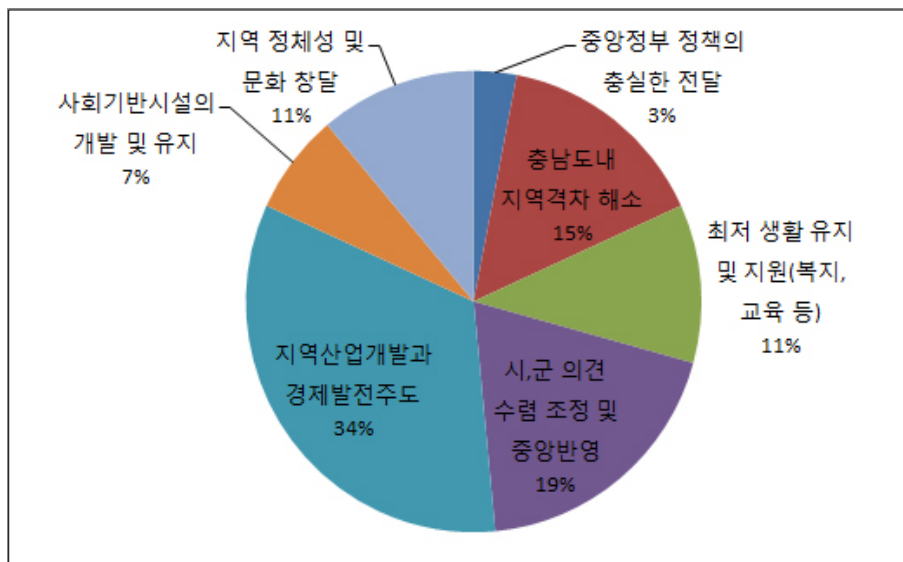
- 이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11일부터 5일간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도정평가단, 도정 모니터단 등 총 1,62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총 104명임
 - 지방자치 변화 방향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충청남도에 적용하기 위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
 - 광역도로서 충청남도의 역할과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 지방정부화를 위해 필요한 방향 및 바람직한 광역도로서 충청남도의 역할과 기능 파악. ‘도는 도답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방향성 탐색
- 광역시도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강화해야 할 부분
 - 자치행정권(61%), 자치입법권(19%), 자치사법권(10%)의 순으로 나타남. 아직도 충청남도가 지방정부로서의 독자적 지위를 갖기보다는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



[그림 1] 광역시도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강화해야 할 부분

● 광역자치단체의 핵심적 기능

- 충청남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지역산업개발과 경제발전 주도(33%), 시·군 의견 수렴 조정 및 중앙 반영(19%), 충남도내 지역격차 해소(15%), 최저 생활 유지 및 지원(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중앙정부 정책의 충실한 전달은 3%로 나타나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산업개발과 경제발전 주도’는 도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단위로서 독자적인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음.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해서 개발 사업을 가져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기반 순환경제’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시·군 의견 수렴 조정 및 중앙 반영’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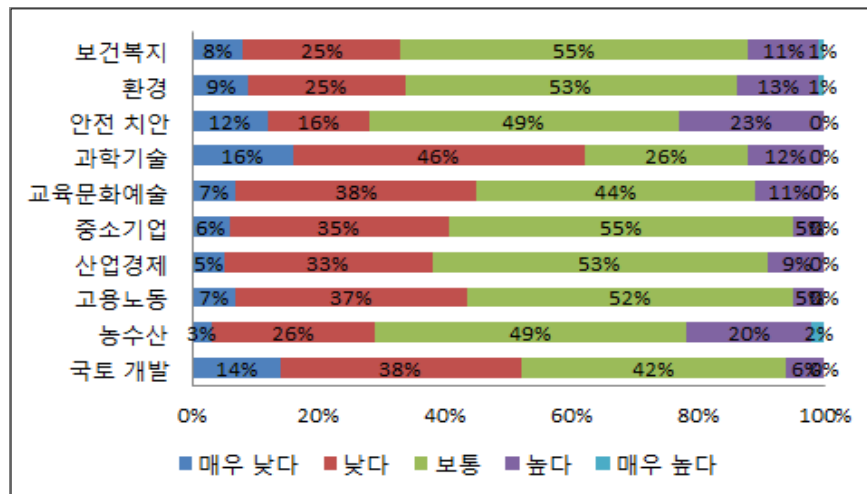


[그림 2] 광역자치단체의 핵심적 기능

●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수준 인식

- 정부의 주요 정책영역에 있어서 현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높지 않은 보통 정도라는 의견이 대부분.
- 특히 과학기술에서는 매우 낮다(16%), 낮다(46%), 그리고 국토개발에 있어서는 매우 낮다(14%) 낮다(38%)로, 타 분야에 비해 과학기술과 국토개발에 있어서 도가 갖는 권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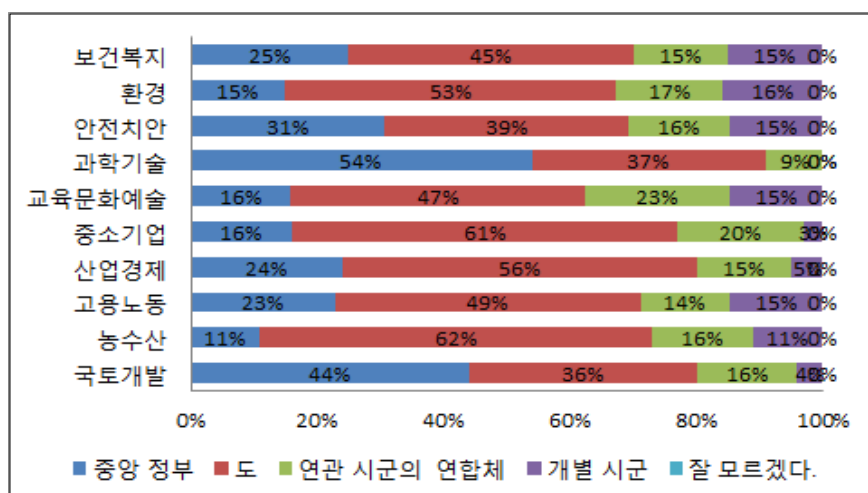
- 이에 비해 농수산 분야에서는 매우 높다(2%), 높다(20%), 안전치안 분야에서는 높다(23%)로 타 분야에 비해 도가 갖는 권한 수준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



[그림 3]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수준

● 정책영역에 있어서 정책주도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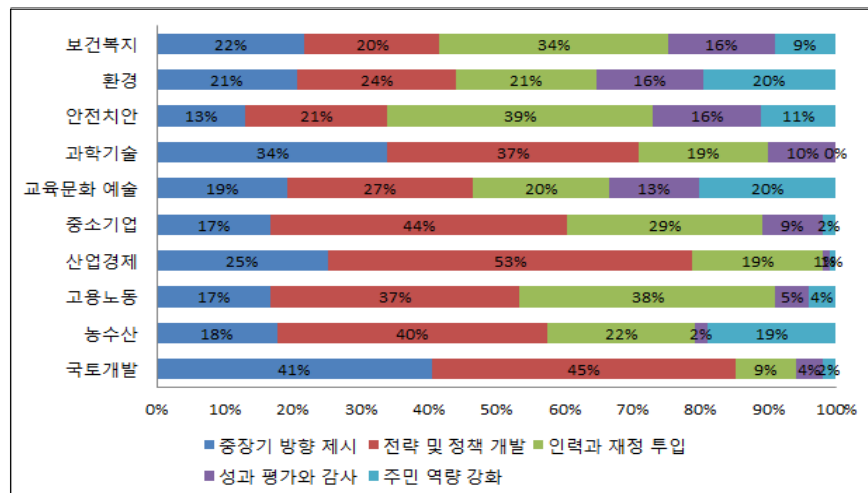
- 주요 정책영역에 있어서 어느 단위가 정책주도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도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평가
- 국토개발과 과학기술은 중앙정부가, 그 밖의 농수산, 고용노동, 산업경제, 중소기업, 교육 문화예술, 안전치안, 환경, 보건복지는 도가 정책주도권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
- 농수산(62%), 중소기업(61%), 산업경제(56%), 환경(53%)의 순서로 도가 중앙정부나 시군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책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54%)과 국토개발(44%)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그림 4] 정책영역에 있어서 정책주도권의 위치

● 도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인식

- 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수행할 기능에 대하여 과학기술과 국토개발, 산업경제, 과학기술에서는 ‘중장기 방향제시’와 ‘전략 및 정책개발’ 제시
- 중장기 방향제시가 필요한 분야는 국토개발(41%)과 과학기술(34%)로 나타남. 전략개발 및 정책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산업경제(53%), 국토개발(45%), 중소기업(44%), 농수산(40%) 고용노동(37%), 과학기술(37%)로 도의 기능이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되어야 함이 나타남.
- 인력과 재정의 직접투입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안전치안(39%), 고용노동(38%) 보건복지(34%) 순.
- 성과평가와 감사에서 높게 나타난 분야는 안전치안, 환경, 보건복지로 각각 16%로 나타났고, 주민역량강화가 높게 나타난 분야는 교육문화예술(20%), 환경(20%), 농수산 분야(19%), 안전치안(11%)의 순서로 나타나, 이들 분야가 향후 도가 주민역량강화를 할 경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림 5] 도의 정책적 역할

-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면 자치단체의 자주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함.
 - 선진 해외사례들 중 연방제 국가들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비되는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하는 독자적인 정부기능을 갖추고 있음.
 -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도 지방정부에게 포괄분권을 하므로 지방정부가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지방분권에 대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
 - 지방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권한은 자주적인 법률제정권과 이에 상응하는 사법권, 그리고 조세에 대한 권한임.
 -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방자치 제도의 확일성을 낮추고 지방정부간, 정부-기업, 정부-민간 등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행정적 메커니즘이 제공되어야 함.
 - 공공부문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구성하되, 이를 지방정부와 전략적 협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분배를 탐색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의 기능은 국방과 안보, 외환과 재정, 교육이나 복지와 같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국가적 표준 설정 및 관리, 대규모 국책사업과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한정하며, 나머지 국민의 삶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을 검토해야 함.
- 지방정부 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
 - 도의 기능은 역사 문화적 지역정체성에 근거하되, 정치적으로는 지방정부, 경제적으로 광역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면서, 광역경제기능, 광역생활기반기능, 안전기능, 복지기능 등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임.

- 중앙정부의 권한이 분권·분산되면서 이에 맞물려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강화는 물론 주민과 주민조직들의 상향식 자치역량도 강화되어야 함
- 분권과 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큰 조건 중 하나는 주민과 주민조직,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그 안에 존재하는 중간조직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임. 우리의 기초자치 단위가 외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므로 그 만큼 주민역량 강화와 아울러 기초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임.

● 충청남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향

- 충청남도의 광역지방정부로서의 위상정립 방향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상급 자치단체, 국가행정기관으로 도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 시키고, 지방자치단체적 지위와 상급자치단체적 지위는 유지 및 강화하고, 국가행정기관적 지위는 약화되어야 할 것임.
- 복지재정의 확대,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형재난 대응능력 강화, 지방분권의 강화 등 환경변화들은 우리나라 자치계층인 도의 지위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로 새로운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

[표 1]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향

구분		도의 변화 및 영향요인	도의 대응방향
환경적 측면	시대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양극화의 심화: 도의 복지재정 수요 확대 및 복지정책의 다각화 필요 - 지역 계층 간 차이 확대: 주민가치 다양화로 인한 행정대응의 적정화 및 사회적 자본 확충 - 글로벌 경제화 및 노동유연성 강화: 경제성장에 대한 욕구 및 광역경제권 구축 - 재난안전 및 환경대응 요구 심화: 지속가능발전 기능 확대 - 도행정의 분권 강화: 거버넌스 확산으로 인한 자율과 책임의 지방 구조 개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의 강화 - 광역행정 기능의 강화 - 광역경제권 활성화 - 복지재정의 확충
제도적 측면	도의 기능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 행정체제 문제: 국가의 권한구조(70%)와 재원구조(80%) 집중, 특행기관과의 업무 중복, 50만 이상 시에 대한 특례, 국가 광역권 개발계획 연계 미흡 등 - 국가·도·시·군간 중복사무 과다 및 경유기관 인식 	
구조적 측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중심성 증가: 시군구통합, 대도시 특례 발굴 등 - 도의 위상 변화: 특행 정비,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도입 - 지방정부화: 외국의 지역정부화 및 광역적 행정구역개편 경향 	

● 도 지위의 변화 및 재정립 내용

- 국가-도 간 관계에서 보면, 도의 국가행정기관적 지위 약화로 도의 사무는 확대(기관위임 사무의 이양 및 폐지, 특행사무의 이양 등)되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상급자치단체적

지위의 유지로 도의 광역행정사무는 확대 혹은 유지되고, 일부 지도감독사무와 연락조정 사무는 축소되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

- 국가-도-시·군 간 기능 중복 최소화 원칙 하에서 중복사무의 자치단체 및 하위단체 우선 이양 조정을 통한 도의 기능 재정립과, 국가와 도 간에는 국가통합성(전국통일처리성/전국 규모성/고도전문성) 기능 이외의 도기능화를 통한 지방분권형 구조 중심의 기능 재정립을 도모해야 함.
- 도와 시·군 간에는 지역통합성(통일성/경제성/효율성/광역성)기능을 제외한 주민대응성 기능 중심의 시·군 기능화를 통한 보충성 원칙 중심의 기능 재정립을 추구하도록 해야 함.

구분		내 용
도 지위의 변화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지위: 유지(지방자치법, 특별법에 근거) - 상급자치단체 지위: 유지 및 강화 (지방자치법에 근거) - 국가행정기관 지위: 약화
도 기능 재정립 방향	도의 지위 변화에 의한 기능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도간 관계에서 도의 사무 확대(국가의 기관위임사무 폐지, 특행사무 이양 등) - 자치 2계층(도-시군) 하에서 도의 역량 강화(광역행정기능 강화: 경제, 환경, 교통, 도시 및 지역계획 등)
	도의 기능 재정립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통합을 가정한 기능분석 결과에 의한 재정립(단기적 접근) - 국가-도-시군 간 기능연계 방식(중복기능 이양 단계) - 기능조사(분석) 결과에 의한 지방 수행 가능한 기능(사무) 중심 <p>※ 장기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도, 도와 시·군 간 기능분리 방식(중복기능 완전해소 단계) - 시도 통합을 고려한 국가-도-시군 간 거시적 역할분담체제 구축
	도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원칙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도, 도와 시·군 간 기능중복 최소화 원칙에 의한 기능(사무이양) - 중복사무의 자치단체 및 하위단체 우선 이양 조정 - 지방분권 및 보충성 원칙에 의한 기능(사무)이양 - 국가와 도(분권형 구조 중심) : 도 수행 가능사무의 이양 → 국가 통합성(전국통일 처리성, 전국규모성, 고도전문성)을 제외한 기능의 도 기능화 - 도와 시·군(보충성 원칙 중심): 도의 광역행정기능을 제외한 시·군 수행가능 사무 이양 → 지역통합성(통일성, 경제성, 효율성, 광역성)을 제외한 주민 대응성 중심의 시·군 기능화
	도의 기능 재정립 대상사무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도 간: 세부사업단위 이양, 중복사무 이양, 판별사무 이양 - 도와 시·군 간: 기능단위 이양, 중복사무 이양, 판별사무 이양, 특례사무 이양

● ‘도는 도답게’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개발 필요

-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개조하는 것을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주도적 입장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권 역량 개발이 시급
- 도의 분권 역량은 보충성의 원리를 반영하여 아래로부터 정부의 일을 상향식으로 구성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분석역량이 필요함

-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는 전략적인 기능 조정과 업무 재분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절차들이 주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도민 수요에 대한 중장기 미래 예측 조사
 -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 현재 도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실태 조사
 - 현재 법제에 정해진 사무 전수조사 (국가-도-시·군-읍면동 계층별)
 - 전문가에 의한 사무배분에 대한 검토
 -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실무적 판단에 의한 사무배분 실태와 향후 방향 조사

권 선 필 교수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042-829-7825, philkwon@mokwon.ac.kr

** 본 리포트는 충남연구원 2014 전략연구과제 “지방정부에서의 공공 행정 영역에 관한 변화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일부 요약·재구성한 것임

◆ 참고 자료 ◆

- 고영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담: 현황과 개선방」 예산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10.11, pp.1-27.
- 김병국, 김필두. 「도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12.21, pp.1-65.
- 박정민. 「정부 간 관계 모형에 관한 고찰」 NGO연구 제6권 제1호, 2008, pp.165-190.
- 심재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스웨덴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1호, 2013, pp.109-131.
- 안영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12, pp.1-27.
- 이기우 외. 「정부 간의 역할정립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본질과 과제(새사회정책전략연구원)요약, 2009, pp.1-11.
- 이용환 외. 「한국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3.5, pp.1-20.
- 이자성.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응한 행정사무 공동처리 방식의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 학술대회, pp.311-332.
- 조성호 외. 「중앙과 지방간 사무재배분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9.7, pp.1-4.
- 최봉기. 「한국지방자치 20년의 회고와 지방자치 선진화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 지방자치 학회보 23(3), 2011.9, pp.5-37.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동·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규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삼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아·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전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종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태·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2015-39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지훈	2015.10.08
2015-40	일본 후쿠오카현의 수소프로젝트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5.10.13
2015-4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임성규·정명채	2015.10.22
2015-42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맞춤형 농정혁신모델	김기현	2015.10.27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충남리포트

ChungNam Report